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향토유적 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향토유적 보호 및 관리의 원칙
-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원형유지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소유자 관리 원칙 신설(안 제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 나.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 지정의 기준 및 해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정신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명시(안 제3조 제3항, 제10조, 제13조 및 별표)
- 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
-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의사항 일부 수정(안 제4조)
 - 위원 위촉 횟수 제한(안 제5조 제5항)
 -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신설(안 제6조 제2항)
 -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 심의·의결 신설(안 제6조 제3항)
 -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 및 해촉사항 세분화(안 제7조 및 제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문화재보호법」
- 나. 「문화재위원회 규정」
- 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2.1.17. ~ 2022.2.7. [21일간]
-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 최근 개정 사례 :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현행 조례 유사사례 : 「남양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10. 관련부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향토유적 보호의 기본원칙 및 지정)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을 제5조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향토유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존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제4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적의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적 주변의 건설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문화재 업무담당국장, 안전도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하남시문화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신청) 향토유적으로 지정받으려는 유적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서
2.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고증자료
4.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제11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적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을 지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적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적이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에 향토유적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향토유적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정한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3. 보호구역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고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적을 지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하남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적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하남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문화재 관련 단체
3. 새마을지도자
4.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제16조(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진입로의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5.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보조 등) 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단체)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적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적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유적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7. 그 밖에 향토유적의 관리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2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적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자(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문화체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한 종 수
	팀장 직위·성명	문화재관광팀장 송 정 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 지 영 (790-5282)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향토유적 지정 신청서

①명 칭					
②소재지					
③소유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④관리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⑤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시대/연대		구조/형식/ 형태		수량/크기/ 규모	
토지면적	㎡ (평)	연혁/유래			
건축면적	㎡ (평)	/특징			
⑥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인)

하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서 2.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고증자료
4.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지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유적 제 호

지 정 서

위 치 :

명 칭 :

수 량 :

위 유적을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관계법령 발췌서

1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21. 5. 1.] [대통령령 제3146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 9. 25., 2019. 1.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9. 1. 15.>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4.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2021. 7. 14.] [경기도조례 제7094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20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6.07.19.>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이 변경

된 경우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4절 문화재위원회 [신설 2016.07.19.]

제42조(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7.19.>

제43조(기능)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7.19.>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
7.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1.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문화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07.1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6.07.19.>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문화재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07.19.>
7.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2조(간사 등) ① 문화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별 문화유산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07.19.>

② 간사는 문화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6.07.19.>

참고자료

1 최근 개정 사례(타 시·군 조례)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20.11.17

제1장 총칙 (신설 2020. 11. 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향토문화재” (이하 “문화재” 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 라고 한다)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호·보존·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향토문화재위원회 (신설 2020. 11. 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화재의 보호·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향토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1. 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인정과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주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소 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보존·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1. 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촉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정책팀장이 된다.

제3장 향토문화재 지정 등 (신설 2020. 11. 17)

제13조(문화재 지정기준)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14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의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문화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시장은 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한 경우 혹은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고시된 날에 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가 처분·양도 등에 의해 화성시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중전 제13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15조(유형문화재 등 지원) 시장은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보호·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권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유자 등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생계와 관련된 비용이나 주택 수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의 훼손·자연적 변형 등을 수리·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중전 제14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4장 향토문화재 관리 및 보호 (신설 2020. 11. 17)

제21조(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문화재를 보호·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형문화재의 경

우 관리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재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은 필요에 따라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중전 제20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2조(유형문화재 보호·보존·관리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해당 문화재의 청결유지·도난방지 및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시장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처분·양도·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전 제21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3조(신고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2. 관리자를 지정·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3. 문화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중전 제22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4조(보호·보존·관리의 원칙) ① 시장은 별지 7호서식의 문화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중전 제23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5조(보호·보존·관리 사항) 문화재를 보호·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검토 할 수 있다.

1. 시장은 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별지 제8호서식)을 설치
2.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매도할 의사를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문화재의 주변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장은 문화재 저촉여부 검토

[중전 제24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6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 1회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형이 망실·훼손·변형 등이 된 경우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0. 11. 17)

[중전 제25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7조(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재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郷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중전 제26호에서 이동 2020. 11. 17]

2 현행 조례 유사사례(타 시·군 조례)

남양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설치) ①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남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향토유적지정)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지정한다.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7조(보호구역 설정)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1.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 2.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8조(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지정) ①향토유적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지정한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별지 제3호 서식)
- 3.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 4.향토유적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보전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5.시장은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야 한다.

①시는 년2회(3월, 9월)점검

②읍, 면, 동은 연4회(2월, 6월, 8월, 11월)점검

제13조(경비보조등) ①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등 향토유적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작성보관) ①시장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도등) ①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나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항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